

#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F a i r   T r a d e   C o m m i s s i o n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 contents

### 목 차

I.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가요?	3
II.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자율성, 최소성, 공정성입니다.	4
II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
IV. 가이드라인을 잘 운용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전문	8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

I

##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가요?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풀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지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력업체 선정 ·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협력업체를 선정 ·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하도급별점 감점 및 과징금 감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조달청,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II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자율성, 최소성, 공정성입니다.

### ■ 자율성(인센티브 제공)

- 기업의 자발적 채택에 의한 운용을 원칙으로 하여 규제가 아니며, 사용시 각종 인센티브(하도급별점 감점, 과징금부과 감경 등)가 제공 됩니다.

### ■ 최소성(활용 가능성)

-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하고 구체적·개별적인 내용은 각 업체의 여건에 맞게 설정·운용하게 함으로써 도입 및 활용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운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수준까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III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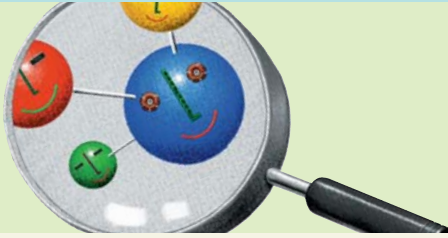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 하여야 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부당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 ■ 부당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 및 차별은 금지되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 등록 취소시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조치하여야 합니다.
-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하도급벌점 감점과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입니다!”

\*

## IV

### 가이드라인을 잘 운용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협력업체 선정·운용 기준의 설정 및 공개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을 가격·품질·기술력 등에 의한 합리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거래개시 단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동반성장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기술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촉진되어 경쟁기반이 다져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건전한 거래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전문

〈제정 2006. 6. 2〉

###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과징금 감경사유로 정한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 · 건설 ·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 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I.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 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 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3.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자신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원사업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www.ftc.go.kr](http://www.ftc.go.kr) / Tel. 02-507-1467, 1847 / Fax. 02-507-6563